

# 이번주 대정부질문 '조국 대전' 예고

### 26일 부터 4일간...민주, 민생·개혁 등 정책질의로 차별화 한국당 사모펀드 의혹 화력 집중...바른미래 '무시 전략' 방침

여야가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한다. 대정부질문 성적표가 곧바로 이어질 국정감사는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버리고 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 동안 펼쳐진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나서는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 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을 향한 보수 야권의 거센 '파면 공세'가 예고된 만큼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한 방어 전략도 고심 중이다. 최근 당 정책회의를 통해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은 '조국 개혁 책임자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현 정부 들어 한미·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를 거론하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킬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날이 설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총선 물갈이폭 커지나

### 국정지지도 하락에 인적 쇄신 가능성...호남 개혁 공천 관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로 민주당 내부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물갈이'와 '전략공천' 폭이 커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당분간 국정 지지도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은 만큼 민주당이 위기 돌파를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호남발 개혁 공천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당내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 중진들을 중심으로 옹호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또, 전략공천 카드도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태한 대표는 그동안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지만, 만약 지지도가 더 하락하고 개혁 요구가 비등하면 직접 전략공천의 칼을 휘둘러 줄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 대표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전체의 20% 안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22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요즘 들어 물갈이, 물갈이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아주 절박하게 밀리지 않는 한 인위적인 물갈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영입, 파격적 공천을 통해 잃어버린 중도층과 20대를 되찾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여러가지 상황이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호남도 과연 전원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태로 가다가는 현 지구당 위원장들이 대거 공천권을 따내는 등 정치적 기득권 구조가 오히려 강화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률과 현역의원 전원 경선 방침을 확정된 상태다. 자발적 불출마를 촉구하는 '중진 용퇴론'이 거세질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지역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원이다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지도부가 기존의 경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후보자 검증 등을 통해 경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제3지대 힘 싹졌다" 권노갑·정대철 탈당

### 평화당 고문단 11명 탈당계

민주평화당 소속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한 당 고문단 11명이 지난 20일 탈당했다.

평화당에 따르면 동교동계 원로들이 주축이 된 당 고문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인근에서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탈당 결정을 한 뒤 곧바로 탈당계를 냈다.

전체 고문단 14명 중 이날 탈당계를 낸 사람은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외에 문팔과·박양수·신중식·윤철상·이훈평·홍기훈 고문 등 11명이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오른쪽)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맨 왼쪽)에게 하태경 의원 징계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분당열차 탄 바른미래

### 비당권과 "주내 새 지도부 구성"...당권과 "차라리 탈당하라"

바른미래당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 사실상 분당이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22일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비당권파 측에 따르면 이번 주 내에 손학규 대표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당권파 측 모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강력한 대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다시 회동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자체 지도부 구성 가능성에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깎아내리는 분위기다. 한 당권파 의원은 "비상 지도부를 꾸린다 해도 의사결정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법상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당권파 측에서는 비당권파가 설령 새 지도부를 만들어도 당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지 못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당권파가 사실상 '탈당'하

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7월 24일부터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 전원의 보이콧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마비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비당권파 하태경 최고위원의 논란성 발언을 문제 삼아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 최고위에서의 당권파 대 비당권파 구도는 '4 대 4'로 짜여졌다. 이에 대한 비당권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당권파인 이준석 최고위원도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에서 최고위원 징계를 둘러싼 당권파와 비당권파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대신 '민부론'

### 경제대전환 국민보고대회...민간주도 경제 회귀안 제시

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정비록(懲愆錄)'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확실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을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일하는 시대에

서 '배급 시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 재정이 파탄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 대전환 ▲ 국가주도 경제에서 민(民)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 노동시장 구축 ▲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